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 발생시 정부가 농가에 피해보상 청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이어 최근 들어 소브루셀라병,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등 국내 상재질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 같은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판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마련, 앞으로는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제1종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3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도 제1종전염병과 같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해 교통차단,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조치를 강화했다.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하는데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동안은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를 수의사가 하도록 한 것을 농장주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장주도 신고의무를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현재는 반송, 소각 또는 매몰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랜더링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처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의 강제폐기(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만 지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하여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토록 했다. 이외

에도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했다.

■ 정세균 장관 “한·미 FTA지연엔 EU와 먼저 할수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잘 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EU(유럽연합)와 먼저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지난 8월 23일 저녁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산업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무역추진권한법) 종료시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oha개발아젠다) 협상이 중단된 상태여서 미국도 필요할 경우 (2007년 7월1일 종료되는) TPA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장관은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을 병행할 수도 있으며, 조건이 맞을 경우 EU와 협상을 먼저 타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EU 간 FTA 협상은 현재 예비협상 단계이며, 양측은 9월 2차 예비협상을 열고 공식적인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건강바람 타고 흰우유·발효유강세

전체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건강바람을 타고 흰우유와 발효유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해시비로 가공우유 판매를 줄고 출산율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영유아제품 매출은 감소했지만 품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질 업그레이드에 나선 기능성우유 판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의 경우 올 상반기중 작년도의 4520억원 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472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흰우유는 100억원의 증가한 반면 치즈·탈지·전지분유 등 가공제품 판매는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우유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 있는 우유'와 '집중력우유' 그리고 발효유 '장마스터' '유기농우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남양유업은 상반기에 작년동기의 3938억원에 비해 100억원이 늘어난 4014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흰우유는 1400억원을, 발효유는 9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흰우유는 50억원, 발효유는 30억원의 증가한 것이지만 출산율과 직결되는 조제분유는 판매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유업은 전년도의 3502억원보다 80억원이 줄어든 34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쳤는데 흰우유는 1112억원, 발효유가 545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조제분유는 642억원으로 무려 40억원이나 감소했다.

한국야쿠르트도 지난해보다 300억원이 많은 4920억원어치를 팔았는데 대표제품인 '월'이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작년보다 70억원이 감소한 264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는데 이중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55%인 1477억원을 바나나맛우유, 요플레 등에서 올렸다.

이 회사는 가공유의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발효유 '5색5감'을 출시했으며, 바나나우유 시리즈 제품으로 '바나나맛 우유 라이트'도 선보였다.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처 신설 강행 '파장'

정부가 최근 식품업무를 총괄할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농업계는 물론 의약업계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국무조정실이 정부 실무부처에 대해 식품안전처 설립 반대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까지 실시하면서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22일 문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국민 보건을 위해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은 국민 건강은 무시하고 정부 조직 확대를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부는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우윤근 의원이 주최한 '농·축·수산물 식자재 대토론회'에서도 농업계에서는 "국무총리실이 주장하는 식품업무 일원화는 걸음으로만 일원화일 뿐, 사실은 생산과 가공업무를 각각 다른 부처로 분리하는 이원화"라며 "식품업무 일원화를 위해 농림부에 '농식품위생안전청'을 만들고 부처 명칭도 '농업농촌식품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감시팀을 파견, 이들 부처가 관련 단체를 이용해 식품안전처 설립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은 올 3월2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만 결정됐을 뿐, 아직 당정협이나 국무회의도 거치지 못한 데다 국회 의결도 남겨두고 있어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다.

▣ 배합사료가격 인상 불가피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들쭉이 고 있다.

배합사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이 옥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함으로써 옥수수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데다 폭서로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재고량마저 감소하고 있어 옥수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사료원료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배합사료업계로서는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합사료업계는 지금 상황으로는 당장 사료가격을 인상해야 할 처지이지만 축산업계와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늦춰 오는 9월 중순경 사료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옥수수 가격 폭등이 물고 올 파장을 우려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의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되나

농림부 축산국의 관계자는 4일 “기반시설부담금의 원래 취지가 신도시 건설 등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축사에 부과한 것은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말 농림부와 건교부 담당자들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 축사 및 부대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행정법무팀의 관계자도 이날 “일단 농림부와 건교부의 과장급 관계자들이 만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거친 상태”라며 “현재는 축사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건교부와 어떻게 협의해나갈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달 초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12일부터 시행됐으며, 건축 연면적이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개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와 단체들은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8월1일 농림부와 건교부에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 조사료 생산 지원정책 효율적 ‘손질’ 시급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조사료 생산 지원 정책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조사료 생산 지원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료 생산 지원 대상 지역중에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조사료 생산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 부족으로 조사료 생산 계획만 있고 그 결과는 계획에 크게 미흡한 경우도 있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총체보리 생산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역의 지원도 홍보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에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낙농가 신모씨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총체보리사업이 전남북이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료 종류에 따라 다양한 축산물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거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조사료 생산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자급조사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시급함을 지적했다.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동원그룹 축산무대 본격 진출

동원그룹도 축산사업에 본격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축산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최근 선진사로 농산공장을 인수한데 이어 덴마크유업도 인수했고, 해태유업 인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그룹은 이미 육가공업(리치햄)에 진출한 만큼 앞으로 계란 및 식육사업에도 참여, 생산 및 유통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동원 F&B에서 오는 2012년까지 현재 매출의 3배인 2조원을 목표로 하는 점을 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축의 하나인 육가공 유통 및 축산물 생산 부문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축산사업에 많은 투자를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통은 소비자와의 만남이고, 사료공장은 생산자와의 만남인 만큼 계열화 시스템을 통해 선진사료를 동원그룹의 축산사업 센터로 발전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원그룹의 축산사업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에서 축산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기업축산시대가 본격화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돼지 도축량 7% 줄어든 반면 소는 129% 늘어

7월 돼지 도축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나 준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의 축종별 도축실적에 따르면 7월 돼지 도축량은 91만203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만309마리에 비해 7%인 6만8274마리나 줄었다. 반면 소, 닭, 오리의 도축물량은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는 4만4417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325마리에 비해 12.9%인 5092마리가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소 품종은 한우로 3만276마리가 도축돼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743마리에 비해 17.6%인 4533마리가 늘었다. 유우 도축량은 5911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가 늘었고 육우도 8227마리가 도축돼 3.4%가 늘었다. 수입소도 3마리가 도축됐다.

공익수의사 내년 2월중 선발, 5월부터 업무 수행

내년 4월에는 공익수의사들이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돼 가축방역 부문의 인력부족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봉급지급 기준 등을 골자로 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 제정·공포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연간 150명의 전문인력을 방역현장에 배치할 수 있게돼 인력 부족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공포 내용에 따르면 공익수의사 배치는 시·군·구,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순으로 하되, 기관별 배치인원은 가축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조해 내년 2월 10일까지 공익수의사 신청을 받아 선발후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군사교육을 거쳐 4월중 근무기관에 배치할 계

획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익수의사들의 가축방역 업무 수행은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부터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확대

9월 1일부터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축시장, 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와 암송아지를 포함한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특히 검사증명서 미휴대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 지급됨에 따라 축산 농가 및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가들이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를 구입해 줄 것과 구입한 소는 격리 사육하고 소부루세라병 검진 후에 합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웃농장의 소와는 접촉을 피하고 유산 발생시에는 방문을 금지할 것과 유·사산 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 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관계자는 “소부루세라병 근절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에 대한 동참을 당부했다.

농림부, 조제분유 이물질검사 강화

유업계가 분유 이물질 검출 소동으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검역원이 조제분유 이물질사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단체와 KBS스페셜은 지난 2월 미국산 분유 엔파밀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유통되는 분유에 대한 검증을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의뢰해, 분유 33통 중 10통에서 금속성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는 지난 19일 공중파를 통해 방영됐다. 유업계는 국내 제품 검출률이 17%로 현저히 낮은 점에 주목하면서도 조사 방식 등에 무리가 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한국유가공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고배율 현미경으로 확대해야만 확인이 되는 구리나 철 등은 이 물질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전자현미경을 통해 우유에 본래 함유돼있는 영양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출산율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업계에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와 관련 또한 검사결과 및 검사방법의 적절성, 판정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번주 내로 보도상에 문제가 된 제조사의 동일제품을 추적해 비교검증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원의 관계자는 “이미 생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항이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추가 실험을 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최근 국내 및 수입산 조제분유 5개사 10개 품목의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속 함량과 같은 이물질은 없었으며 미세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탄화물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역원은 “이번에 검출된 극미량의 탄화물은 우리나라의 이물질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농무부의 ADPI(미국유제품학회) 기준상으로도 적합한 A등급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이 금속조각 등의 이물질로 오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검역원은 조제분유의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키 위해 HACCP 지정 업체에 대한 탄화물 기준마련으로 생산과정별 검사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조사사업 등을 통해 조제분유의 탄화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발췌 :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